

햇빛·바람·수소 품은 전북

#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미래 연다

## 새만금 인근 7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허브 재도약 '재생에너지 누리길' 마련

전북자치도가 새 정부의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9,833GWh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끌 선도 지역임을 보여준다.

특히, 새만금 인근에 조성 중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구축되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북 지역경제 재도약의 핵심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에너지 주민소득 지급, 에너지 자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대선 후보시절 전북방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하는 등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 ▲전북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군산 해상풍력 발전단지 1.6GW 등 총 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오는 2031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

역에 총 14조7,000억여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올 2월까지 총 1.4GW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됐다. 현재 첫 번째 확산단지 내 고창 인근 해역에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시행자 공모가 진행 중으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2026년까지 단지배치 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만금 내측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총 3GW 규모(태양광 2.8, 풍력 0.1, 연료전지 0.1)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2030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체 사업기간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하고, 계통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건설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주책지원사업' 1만3,235가구, '용북지원사업' 1만2,445가구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수소융합 단지인증센터(완주),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부안),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완주) 등 수소산업의 기술 상용화 및 인증 기반을 확충해 오고 있으며,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완주에 수소 생산시설(2.4톤/일)을 구축해 지난해 4월부터 가동 중이며, 부안에 수전해 수소생산기지(1톤/일)를 연내 목표로 조성 중이다. 최근 CCU 기술 기반 탄소중립 연료 R&D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소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일진하이슬루스, 두산퓨얼셀 등 주요 기업들이 집적된 전북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완주 봉동에는 수소특화 국가신단 예타가 진행 중이며, 수소 상용모빌리티 기반의 수소 클러스터 구축 예타사업도 기획중에 있다.

###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제시하였고,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에 신미래 기획수석실 신설과 함께 기후환경에

너지비서관 배치하고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 아젠다인 '재생에너지 누리길'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누리길'은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가, 국민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북형 재생에너지정책이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저렴한 전기요금 제공과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RE100 혁신특구 지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전북을 기업하기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에너지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및 계통포화지역에 우선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지역 우선공급 의무화, △전국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지역 내 거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력망 이용요금의

거리별 차등 적용, △인구감소지역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땅이용요금 감면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전원 확대를 통해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적극 추진한다.

최근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력계통 포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 전 지역이 계통포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처 확보를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계통포화지역 내 AI·데이터센터 특구 우선 지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도는 햇빛과 바람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북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 RE100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물론 국가와 국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반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김윤덕 사무총장

### 2025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 국회의원)이 3일 소비자 친화 입법 부분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소비자협회'와 '컨슈머포스트'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2025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전기요금과 난방비, 교통비를 인상하고 시장 물가를 잡는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제 장치인 '공공요금 자문위원회'와 '물가 안정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김윤덕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음악, 게임, 공연, 영화 및 비디오를 관련 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분회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지역의 E-스포츠 활성화 법안을 통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시민들도 원활하게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소비생활 불공정 행위 예방과 대한민국 소비자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받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25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의 영광을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민과 전주시민들께 돌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당이 되는 소비자들이 지역의 차이로, 경제적 능력으로 또는 연령이나 성별을 비롯한 그 어느 부분에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만드는 최우선 주제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 곁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희성 기자

### 민주 정동영 의원 '전주 AI혁신도시 도약 결정적 계기'

전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이 과기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으며, 전주시 덕진구 첨단벤처단지에서 총 사업비 480억원(국비 300억·지방비 180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rustworthy AI, TAI)'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투명성, 윤리성 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는 이제 AI 신뢰성 기술의 테스트 베드이자 연구·인성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주주권 보호·기업 투명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생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 통과시킨 경제개혁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비대면 참여 기반을 마련하며,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정비한 것이다. 또,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꿔 독립성과 책무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은 포함되지 않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총 리가 거북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을 이번에 여야가 힘을 모아 통과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주가 5천 시대를 향한 긍정적 흐름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주주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등 주식 시장에서 이미 상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 한우산업 지원·탄소중립 전환 길 열렸다

### 민주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한우 수입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과 최저생산비 보장, 탄소저감 촉진 정책 추진 등이 명시됐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한우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입법 과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정부는 거북권 행사 이후에도 재발의와 여야 협의를 통해 3년 만에 법안 통과를 이뤘다.

이 의원은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국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축산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세희 전북지정중소벤처기업청장, 배지연 전주고용센터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원자력시설로부터 재난 예방·도민 안전 확보

### 김정수 도의원, '전북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의 원자력안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주변 주민의 보



호초치 현황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의무에 대한 내용 포함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인구위기 극복 특위, 지방소멸 대응 벤치마킹

###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연구대표 염영선)와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3일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영암군 일대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전남의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자치도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2021

년부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은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누적 배당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각종 기본 소득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

대를 모은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정식 개소하였고, 현재 산업인력 총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방문 상담서비스 등 외국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벤치마킹에서 도출된 선진 정책 사례들은 향후 상임위법 업무보고, 세미나 등 의원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